

프랑스를 기만한 사회당 정부?

김연호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연구원

1981년 대통령 선거 이후 프랑소와 미테랑이 긴축 정책을 포기하는 데는 2년이 걸렸다. 1995년에 그 뒤를 이은 자크 시라크가 또 다시 정책을 뒤집는 데는 6개월이 걸렸다. 선거전 때 일자리를 위한 전쟁을 선포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시라크 정부 역시 유럽 단일 통화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재정 적자 축소를 정책의 우선 순위에서 내려놓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좌파 정권의 승리로 끝난 의회 선거가 있는 지 한 달도 안돼서 프랑스의 신임 총리 리오넬 조스팽이 또 다시 우왕좌왕하는 정책을 시작할 준비가 된 것 같아 보인다.

조스팽이 이끄는 사회당이 정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청년층 17만 명의 고용 창출(공공 부문의 절반 해당), 임금 손실 없는 주당 근무 시간 단축(39 시간에서 35 시간으로), 국유 자산의 민영화 중지, 부가가치세 감면, 연금 및 임금 인상, 문화 및

연구 사업에 대한 재정 지출 확대 등을 약속했기 때문이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공약들이 공공 부문의 적자나 재정 지출의 확대, 세 부담 증가 등이 수반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의 설명이었다. 기적같은 일을 그가 약속했던 것이다.

조스팽은 유럽 단일 통화안에 대해서도 중단없는 지지를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뒤늦게 네 가지 한심한 조건들을 덧붙였다. 여기에는 이탈리아가 유럽 단일 통화 원가입국에 합류해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 게다가 그는 유로 출범을 목표로 한 어떠한 긴축 조치들도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안정화협약(유럽 단일 통화안에 동의한 회원국들이 각자 재정 적자 수준을 GDP의 3% 이내로 유지하기로 한 약속)에 대해서도 그는 '독일에 대한 어리석은 양보'에 대해 구속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결국 조스팽은 안정화협약을 이행하기로 약속하고 말았다. 재정 적자를

‘안정’ 시키겠다고 그가 처음으로 재정 적자의 감축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가 목표로 하고 있는 수준은 GDP의 3.5~3.7%선이다. 스트라우스 칸 재무장관도 1997~98년 예산안이 단일 통화를 대비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밝히고 있어 조스팽의 입장 변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심지어 예산을 초과하는 정부 지출이 있을 경우 장관들의 아파트가 날아갈 것이라는 으름장까지 나돌고 있다. 이와 아울러 재정 적자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을 통한 세수 증대도 따라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프랑스 정부는 필사적으로 저축과 세수 증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주겠다고 공약은 언제 실현될지 불투명해졌다. 5년간 1,750억 프랑에 달하는 소득세 감면을 시행하겠다고 중도 우파 정부의 계획에 따라, 125억 프랑(21억 달러)에 달하는 내년도 소득세 감면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이 역시 새정부에서는 아마 없었던 일이 되고 말 것이다. 법인세도 인상될 조짐이 강하다. 선거 공약에 따라 새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취소한 프랑스 텔레콤의 부분 매각 계획도 재개될 것이 확실하다.

조스팽 정부의 좌충우돌은 노동 정책에

서 잘 나타난다. 취임 이후 그는 월 최저 임금을 4% 인상시켜 6,664 프랑(1,129 달러)으로 올려 놓았다. 그러나 이것은 노조와 공산당이 요구하는 수준의 절반에 그치는 것이고, 2년 전 쥐삐 수상이 내놓은 4.5% 인상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500만 공공 부문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었다. 이전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작년의 임금 동결에 이어 금년에 그나마 1% 인상이라도 있어야 했다. 민간 부문 노동자들처럼 이들도 분명 가을에 있을 임금, 고용, 근무 시간 등에 관한 노·사·정 3者회담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사회당 정부는 사용자측의 반대를 무릅쓰고 근무 시간 단축도 약속했었다. 3년 안에 70만 명의 청년층 실업자들을 위한 고용 창출을 이루겠다는 약속은 ‘향후 5년간’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연립여당 안에서도 이미 조스팽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늘고 있다. 3,000명 이상의 실직을 수반한 르노社의 벨기에 빌부르드공장 폐쇄를 인정함으로써 조스팽은 극좌파 지지자들에게 분노를 샀다. 선거에 승리할 경우 폐업 계획들을 ‘재검토’하고 르노社에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겠다고 약속했던 그였다. 빌부르드는 보다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유

럽에 대한 사회당 정부 공약의 상징이었던 것이다. 이제 죠스팽은 약속을 지키지 못한 대가를 치루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그가 공장 폐쇄를 막겠다고 약속한 적은 없다. 그러나 장뤽 드엔 벨기에 수상의 말에 따르면, 프랑스 수상이 '잘못된 희망'을 붙여넣었던 것이다.

이렇게 여기저기서 불만의 소리가 높아져가고 있지만, 사회당 출신 장관들과 당원들은 여전히 죠스팽을 변호하고 있다. 죠스팽이 권좌에 완전히 안착하지 못했고 게다가 모든 것을 당장 실행에 옮길 수는 없다고 그가 항상 말하지 않았는가. 죠스팽은 자신이 정직하다는 세간의 명성을 소중히 여긴다. 그러니 그에게 시간을 주라는 것이다.

그러나 쥐삐 역시 한 번도 고용 창출, 세금 삭감, 임금 인상 등의 약속을 어기려고 의도한 바는 없었다. 그 역시 시간을 달라고 애원했었다. 그러나 죠스팽에게는 시간이 별로 없다. 유로 참여를 위한 '3% 재정 적자' 기준 충족 시한이 6 개월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재정에 대한 참신하고 독립적인 '회계감사'가 7월 21일로 예정되어 있다. 그 때 무슨 일이 벌어지든간에 분명한 것은 죠스팽이 우선 순위를 재조정해야 한

다는 사실이다. 일자리와 사회 정의를 위한 투쟁을 최우선 순위로 놓자는 논의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와 마찬가지로 유로 참여는 가장 우선시되는 정책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죠스팽은 금년 재정 적자 수준이 3.3% 정도만 머물러도 성공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보다 엄격하고 경계를 늦추지 않는 독일의 입장에서 볼 때 여전히 충분치 않다. 만약 프랑스가 3.3% 수준에 도달한다고 해도 죠스팽은 보다 강력한 긴축 정책을 택하라는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공산당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당의 극좌파 동지들이 그러한 정책 선회를 인정해줄지는 분명치 않다. 사기와 기만에 대한 비난과 금년 가을에 발표될 예산안에 관한 이야기들로 파리의 분위기는 벌써부터 혼탁하다. 

(Source: *The Economist*, July 5, 1997)